전북 정치권, 선거구 축소안 반발

민주 전북 국회의원들 "與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 비판

도의회 "균형발전·농산어촌 대표성 외면한 편파 결정… 반드시 재조정 돼야"

전북지역 국회의원 1석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의회 등 지역정치권이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 국회의원) 등 민주당 전북의원 일동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획정위 제출안을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이며,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죽이기 조정안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등 전북 지역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획정위 제출안을 지방죽이기 조정안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제공>

이들 의원은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하지만 이번 조정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지방소멸과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만 부추긴다"며 "이번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에서는 서울은 고작 1석만 줄였고, 다른 시·도도 감소가 가능한데 유독 전북만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을 줄여 인구 대비 적정 의석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이번 선거구획정위 조정안을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단호히 거부하며,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10석이 반드시 유지돼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정안은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대표성을 외면한 편파적인 결정이다"라며 "지역소멸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방의 선거구를 줄이려는 시도는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자기부정이자 모순적인 처사로 반드시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선거구는 인구기준 못지않게 반드시 지역대표성이 반영돼야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도 보장한 기준이자 원칙이다"면서 "전라북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반대하며, 전북 선거구를 종전대로 10석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2023년 제9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을"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촉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됐으나 조직권은 여전히 지자체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2023년 제9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었으나 조직권은 여전히 지자체에 있어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에 한계가 있기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등한 조직권 부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월 27일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결정된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등은 지자체의 자치조직권 확대에만 기여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주영은 의장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조직구성의 자율권은 마땅히 필요함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정부의 행태는 진정 지방자치를 바라는 것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집행기관과 의회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해 지방의회의 조직자율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내년 총선 출마한다면? 고향 순창 아닌 전주병"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전주시민에게 너무 많은 빚 져… 전주서 마지막 봉사하고파"

선거구 획정 1석 축소 발표와 관련 "전북, 동네북으로 전락… 지금부터 싸워야" 주장

"전주에서 마지막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원로인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고향 순창이 아닌 초·재선 배지를 달았던 '전주병' 지역구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장관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총선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은 순창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살고있지만 전주시민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면서 "총선에 나서게 된다면 전주에서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정 전 장관은 "다만 (시기는) 아직 고심하고 있으며 민심을 확인하고 출마할 것이다"라며 "전북 정치권이 지리멸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 시민의 마음이 있다면 마지막 봉사를 전주에서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민심의 기준은 여론조사로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조만간 관련 공식 출마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 전 장관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발표에 대해 전북은 대한민국에서 동네북으로 전락했다며 총선이 아닌 지금부터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선관위의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결과, 서울·전북 1곳씩 줄이고, 인천·경기 1곳씩 늘렸다. 정말 날벼락에 가까운 충격적인 획정안이 아닐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78% 삭감하는 난도질을 하더니, 이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강 이남에서는 유일하게 전북만 의원 수를 줄이는 상식과 공정의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이어 두 번째 전북 죽이기에 나선게 아니냐며 발끈한 정 장관은 지역 정치권 등에 대안을 제시했다.

정 전 장관은 전북 도민 민민공동회를 제안하고 여야 정치권, 시민 사회, 학계, 언론계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상식과 공정을 파괴한 선거구 확정의 부당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전북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또 전북 출신 국회의원 모두에게 똘똘 뭉쳐서 선거구 의석만큼은 지켜내야 하는 것이 전북 도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전북에 빚을 갚아야 한다며 전북에 대한 민주당의 최소한의 성의 표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동영 전 장관은 "전북이 꼴찌로 전락한 것이 바로 전북 정치의 현실이다"라며 "전북의 자존심을 위해 내년 총선이 아닌 지금부터 싸워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뉴시스

도내 도시재생사업 완료 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윤영숙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이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윤영숙 의원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지 10년이 지나 도시재생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 예정인 지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종료 후 거점시설이 방치되는 등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거나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북도가 공모사업 선정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업 종료 이후에도 효율적인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에 나서야만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도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마케팅, 갈등관리, 회계, 조직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사업 전과 후를 반드시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또한, 전북도는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마을거점시설 개보수 및 운영 사업,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등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인 곳은 총 97개소에 달하며, 총 사업비는 7,488억원에 이른다.

이들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 건립된 건축물인 거점시설은 총 125개동이며, 이미 준공된 44개동 중 운영중인 곳은 31개소, 운영주체 미선정 등으로 미운영중인 곳은 13개동이다. 나머지 81개소는 공사중인 상태다. /김재훈 기자

정읍시 성황산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 4억원 확보

민주 윤준병 의원

정읍시 수성동 성황산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이 생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정읍시 수성동 산62번지 일원 성황산에 '맨발걷기 황톳길'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정읍 성황산 맨발 황톳길 조성 사업은 최근 건강을 위해 맨발걷기가 주목받는 가운데 정읍 시민들이 원한던 사업으로 윤준병 의원이 직접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윤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직접 찾아가 관계자들을 만나며 정읍 성황산 맨발 황톳길 조성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23년 정읍시 하반기 특별교부세 사업'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읍 시민들에게 도심 속 건강한 힐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읍시는 내년 말까지 성황산에 황톳길(연장 2.7km, 폭 2.5m ~3m)을 조성할 예정이며, 황톳길뿐만 아니라 세족시설, 쉼터, 먼지털이, 배수로 등의 시설들도 설치된다.

현재 2023년말 기준 전라북도에는 △장수 방화동 휴양림, △고창 웰파크 등 2곳에서 황톳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윤 의원이 특교세 4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3번째로 정읍시에 황톳길이 조성된다.

산림청과 설치를 협의하고 있는 북면의 국립숲체험원에도 맨발걷기 운동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中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 방지 선제 대처 필요"

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정책 질의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6일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정책질의와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각 학교에 비치된 공기청정기 및 공기순환기의 총구입수와 소요예산을 질의하며, 구입으로만 끝내지 않고 작동여부, 학생 만족도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에서 유입된 마이코플라즈마폐렴의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입원환자의 80%가 12세이하 아동인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마이코플라즈마폐렴이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및 예방되어야 함에도 내년도 감염병 관련 예산이 각 학교운영비에 편성되어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군산시에 건립 예정인 전북도교육박물관 건립이 중앙투자심사에서 교육부의 재검토 결정이 난 사유를 질의하며,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 현재까지 지연됨에도 빠른 대처 및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교육청을 질타하며, 이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와 향후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2024년 교육청 세입예산의 90%가 의존재원으로,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부금이 전년 대비 삭감된 사유와 전북이 전국 교부금 총교부액 5.5%보다 낮은 5.2%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2023년부터 시행된 교육비 지원 정책사업인 에듀페이 추진과 관련,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중고거래 등을 통한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만연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만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도내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와 관련, 전 교육감의 정책은 인조잔디 유해성에 따른 교체를 강조한 반면, 현 교육감의 정책은 인조잔디가 필요하다는 기조변화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심도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과 관련, 2024년에는 국가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교육청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학교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전면적 검토 및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본 사업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이며, 만족도 역시 80% 이상이었음에도 단순히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면 이전에도 줄곧 중복되었으나 진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며, 사회적 이슈로 주목될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을 질의하며, 충분한 충전소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도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교육청 성범죄 발생 관련,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도의회에서 주문하였으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범죄가 발생된 학교 공개 및 해당 교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성교육 등 형식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예방책 방안 마련 등 개선을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본 위원회의 정책질의에 대한 도교육청의 체계적인 검토 및 반영을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